

野 ‘파면’·與 ‘기각’… 정치권, 헌재 선고 여론전 가열

이재명 “헌정질서 지키는 결단할 것” 탄핵연대 “尹은 감옥, 여당은 해체” 국힘 “헌재, 의회독재 면죄부 안돼” 선고일까지 탄핵반대 릴레이 시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여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각각 ‘파면’과 ‘기각’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앞다퉀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전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

며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낼 것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파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이고, 원칙적이고, 상식”이라며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같은 형태의 비상계엄을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파면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인주 최고위원은 “헌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 면허’를 발급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은 파면을 넘어 윤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실정과 독선적 국정 운영,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최근까지 벌여온 행태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의 유무형 자산을 파괴하고 있기에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신속하게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외 여론전을 이어온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탄핵 심판 불복성 발언을 지적하며 기각·각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육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주변에서는 조배숙, 성일중, 임종득, 이인선 의원 등이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선고일까지 이어간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탄원서 180만장을 전달한다.

당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혀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기각 시 야당의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인용이 될 경우 계엄 사태에 부정적인 중도층 여론에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다수 의원, 당원은 기각을 전망한다”면서도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은 기각이나 인용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 책임 의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 대형 “헌재 어떤 결정 내려도 받아들여야”

치안관계 장관회의 주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윤희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

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집했다.

한 대형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형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헌행법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 의장 “尹 선고 분기점으로 국가 안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4월 4일 巳시 선고…尹 탄핵 확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신앙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확신했다.

1일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 ‘신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8대0, 인용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며 “오전 11시는 ‘사시’라고 했다. 이어 ‘4·4·4 죽을 사’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다”며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직 국회의장들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기로 사회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개헌 필요성도 역설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산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또 “추대보다는 경선해서 좀 세계 불어 후보 검증하는 등 국민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당도 긴장하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의견을 냈다.

서울=김선욱 기자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판결 승복해야… 찬반 설득할 결정문 필요”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 광주 방문 “국민 대통합은 이제 시대적 과제”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사진)은 2일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통합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고 국가경쟁력은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



유정복

지더라도 걱정되는 바가 많다”며 “헌재의 결정이 형사사건처럼 항소·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도 찬반 양측을 모두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결정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협의회장은 이와함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정부

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가 주도 서열문화를 조정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 인사, 조직으로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현재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에 대해 긍정평가 하며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동조의 뜻을 보였다.

유 협의회장은 “강기정 시장을 만나 인공지능 선도도시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공감했다”며 “이제는 예산과 시설 등을 지역별로 분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만큼 국가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치해 집중적인 육성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

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우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회부해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